

W:WOOSUNG

2024년 7월

주간 축산 이슈

뉴스클리핑

7월 1주차 HOT ISSUE

- “거부당한 한우농가 생존권, 스스로 지킬 것”
- 안동 양돈장 ASF 확진...3일 20시까지 스탠드스틸
-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정책 법정 간다

“축산물원산지 표시 상시 단속체계 구축”



축산물원산지 표시와 관련, 정기단속 뿐 만 아니라 상시 단속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20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농관원은 눈앞으로 다가온 휴가철 정기단속 계획부터 밝혔다.

오는 7월 8일부터 8월 9일까지 32일간 모두 138개반 285명을 동원, 축산물수입업체와 식육가공업체, 식육 도·소매업, 유명체인점·맛집, 관광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축제장 주변 푸드트럭 등에 대해 외국산 축산물의 국내산 둔갑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훈제)는 물론 양고기 염소고기, 벌꿀, 식육부산물과 가공품도 포함된다.

농관원의 이같은 방침은 여름 휴가철 육류소비가 증가하며 값싼 외국산 축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돼 유통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농축산물유통관리시스템의 유통이력조회를 통해 사전 단속 정보를 수집, 이 가운데 위반 개연성이 높은 곳부터 우선 단속기로 했다.

특히 실효적 단속을 위해 쇠고기 유전자, 돼지고기 항체분석, 훈제오리 이화학적 분석 등 가능한 과학적 검정법은 모두 동원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정기 단속 외에도 추석(8~9월), 김장철(11~12월)에도 활동을 이어가는 사실상 상시 단속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고 축산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앞서 대한한돈협회와 한국오리협회 등 축산단체들은 최근 축산물 수입물량이 급증하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둔갑판매 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강력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농관원에 건의했다.

종개협, 국내 최초 염소 혈통등록 완료… 염소개량 ‘신호탄’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이재운, 이하 종개협)가 염소등록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국내 최초로 제1호 염소 혈통등록을 완료하며 염소개량의 신호탄을 쏘았다.

종개협은 지난달 27일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센터장 한만희, 이하 가축유전자원센터)에서 사육 중인 재래 흑염소에 대해 국내 최초로 혈통등록을 마치고 ‘제1호 염소혈통등록증명서’를 발급했다.

제1호로 등록된 재래흑염소는 생시체중 3.3kg, 12개월령 체중 41.5kg으로 평균 체중(생시체중 2.1kg, 12개월령 25kg) 대비 우수한 성적을 보유하고 있다.

이재운 회장은 “무분별한 교잡과 근친피해로 인한 생산성 저하가 염소농가의 소득창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 체계적인 염소관리를 통해 농가 수익향상에 도움이 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이어 “종개협만의 체계적인 혈통관리와 시스템으로 농가들에게 염소개량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이라며 “가축유전자원센터와의 긴밀한 업무 공조를 통해 향후 개량을 바탕으로 염소산업의 획기적인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가축유전자원센터에서 염소 혈통등록증명서를 발급받은 순종염소는 151마리로 재래흑염소 147마리와 보어종 4마리이며 서로 다른 품종간 교배를 통해 생산된 번식용 씨염소 41마리에 대한 혈통확인서도 발급이 완료됐다. 한편 종개협은 지난 3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정을 받아 염소등록기관으로 고시된 후 염소의 등록규정, 외모 심사기준, 협회비기준 등을 마련하고 염소등록사업을 시작했다

“거부당한 한우농가 생존권, 스스로 지킬 것”



전국의 한우 농민이 여의도에 모였다.

주최 측 추산 1만2천여 명. 동원된 버스만 300여 대다. 한우협회의 단독 집회 규모로는 역대 최대.

이처럼 많은 한우 농민이 모인 결정적 이유는 소 값 하락, 사료값 상승에 따른 경영악화의 이유도 있지만 한우농가와 한우협회가 수년 동안 공을 들여 입법을 추진해온 한우법이 21대 국회 통과 이후 하루만에 대통령 거부권으로 물거품이 돼 버린 것에 대한 실망감이 더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집회 현장에서 만난 한 농가는 “어차피 지금 소를 키울수록 손해다. 한우 농민을 우습게 알고 있는 현 정부에 쌍욕이라도 시원하게 퍼부를 생각에 오늘 집회에 참가했다”고 말했다.

특히,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며 강하게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는 농민들이 많았다.

전국한우협회의 민경천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협회 차원에서 주도한 궂기대회가 아니다. 농민들이 참지 못하고 분해 일어난 궂기대회다. 이 한우 농민의 한 맺힌 절규를 현 정부는 똑똑히 보고, 들어야 한다. 오늘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우협회 지도부는 전원 삭발로 농가의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한우협회의 요구사항은 크게 5가지다. ▲한우법(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 제정 ▲한우암소 2만두 긴급 격리 및 수매대책 마련 ▲사료가격 즉시 인하 ▲사료구매자금 상환 기한연장 및 분할상환 ▲긴급 경영개선자금 투입 등이다.

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구사항을 여야 당 대표에게 전달했다.

덴마크, 가축 탄소세 부과 결정에 낙농업계 반발

낙농강국 덴마크가 가축에 대한 탄소세 부과를 결정하면서 낙농업계의 거센 반발을 얻고 있다.

미국 낙농매체 Dairy Herd에 따르면 덴마크 정부는 2030년부터 농가에서 기르는 가축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1톤당 300덴크로네(약 6만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합의했다.

해당 법안은 올해 안에 의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며, 덴마크는 ‘탄소세’를 도입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될 전망이다. 덴마크 정부는 2035년엔 이산화탄소 1톤당 750크로네(약 15만원)까지 세금을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그 대가로 농가들은 60%의 소득세 공제를 받게 되는데 이로 인해 실제 비용이 120크로네에서 시작해 2035년까지 300크로네로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다. 또, 농가들에게는 목장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도 지급된다.

탄소세로 얻은 수익금은 2년간 농업의 녹색 전환 지원에 사용되며, 이후 용처를 다시 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의 60%가 농지인 덴마크는 탄소세 도입을 통해 2030년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80만톤 가량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정부 자문단은 가장 강도 높은 과세 하에서 가축의 생산량은 약 20% 감소할 것이란 시나리오를 제시하면서 농가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현재 유제품 생산량의 70% 이상을 수출하는 덴마크에 탄소세가 부과되면 우유 생산량과 유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유제품 생산업체 알라푸드의 CEO인 페데르 투보르는 “생산량을 줄여야 탄소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기조에서 나온 이 같은 조치에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낙농가들이 더욱 반대하는 이유는 이미 높은 수준의 탄소저감 사량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강도 높은 과세를 부과하려 하기 때문이다.

페데르 투보르는 “덴마크, 스웨덴, 영국, 독일, 베네룩스에 있는 알라의 9천명의 농부들은 지난 2년 동안 신기술을 통해 100만 톤의 배출량을 줄였다”며 “혁신에 길이 있으며, 우리는 생산을 중단하기보다 그 여정을 계속하고 싶다”고 밝혔다.

“럼피스킨 재발 가능성…예방관리 철저를”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이 지난해 국내에 처음 발생한 소 럼피스킨이 올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되어 있는 럼피스킨은 소와 물소 등에서 발생하는 급·만성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피부, 점막 내부 장기의 결절과 여윈, 림프절 종대, 피부부종 등이 나타난다.

지난해 10월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생한 럼피스킨은 전국 9개 시도로 확산된 바 있다.

농진청은 럼피스킨 예방을 위해 먼저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럼피스킨이 발생한 다른 나라에서도 백신 접종을 통해 발생을 줄였으며, 우리나라도 지난해 전국 일제 백신 접종 후 발생이 급격하게 줄어든 바 있다.

올해도 일부 지역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황. 농진청은 오는 10월까지 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럼피스킨을 전파하는 흡혈 해충을 방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럼피스킨이 주로 파리류, 모기류, 진드기류가 전파하므로 흡혈 해충이 증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흡혈 해충 증식을 막기 위해 무기나 파리 유충이 발생할 수 있는 물웅덩이를 제거하거나 허가된 유충 구제제를 뿌리면 좋다.

또한 퇴비장에 비닐을 덮어 내부 온도를 45℃ 이상으로 높여주면 알, 구더기, 번데기를 제거할 수 있으며 해충을 유인하는 포집망 설치도 서식 밀도를 낮추는데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농장 전용 작업복 사용과 장화 교체, 소독 등의 방역 조치를 철저히 해 럼피스킨은 물론 다른 질병도 함께 예방할 수 있다고 농진청은 강조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강석진 가축질병방역과장은 “과거와 다르게 가축 질병이 계절과 무관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발생한 질병의 국내 전파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축산 현장의 철저한 차단방역 실천이 질병 전파를 막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지’종 젖소 사육기반 구축 시동

정부가 전북 임실지역 농가에 ‘저지’종 젖소 수정란을 보급하는 등 사육 기반 구축에 시동을 걸었다. 농촌진흥청은 25일 임실군에 ‘저지’종 젖소 동결 수정란 15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이 보유한 ‘저지’종 암소에서 ‘생체난자 흡입술(OPU)’로 생산한 수정란을 농가에 보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 보급은 축과원이 지난해 12월 임실군과 한 업무협약(MOU)에 따른 후속조치다. 군은 지역 내 ‘저지’종 사육을 확대하고, 고품질 ‘저지’종 치즈 등을 생산해 ‘임실엔(N)치즈’ 브랜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축과원은 2027년까지 매년 ‘저지’종 젖소 동결 수정란 30개와 암소 생축 5마리를 임실군에 보급하고 유제품 개발에 협력할 예정이다.

이달 전달한 동결 수정란 15개는 올해 보급 예정인 30개 중 상반기 보급분이다. 하반기 보급분과 생축 1마리는 10월에 전달할 예정이다.

‘저지’종 젖소 동결 수정란은 임실군에서 사육 규모, 시설 상태, 목장주의 입식 희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선발한 낙농가 2곳에 보급된다.

축과원은 젖소 품종 다변화를 위해 캐나다에서 ‘저지’종 수정란을 도입해 2013년 ‘저지’종 송아지를 처음 생산했으며, 이후 암소 축군 구성에 힘써 현재 102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그 결과 국내 ‘저지’종 사육마릿수는 꾸준히 늘어났다.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따르면 국내 사육 중인 ‘저지’종은 2020년 180여마리에서 올 6월 기준 802마리였다.

김상범 농진청 축과원 낙농과장은 “이번 보급으로 ‘저지’종 젖소 사육 기반 구축에 첫발을 내딛게 됐다”면서 “국내 ‘저지’종 젖소 사육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낙농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안동 양돈장 ASF 확진... 3일 20시까지 스탠드스틸



경북 안동 양돈장에서 ASF가 발생했다.

경북에서는 3번째, 전국적으로는 43번째 양돈장 ASF다.

ASF중앙수습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신고된 안동 흑돼지 농장의 의심축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최종 확인됐다.

ASF중수본은 이에따라 경북 안동과 영주, 봉화, 영양, 청송, 의성, 예천 등 7개 시군에 대해 2일 20시부터 3일 20시까지 24시간 동안 ASF의 전국적 확산방지를 위한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스탠드스틸)을 발동했다.

해당농장은 흑돼지 일관 193두 농장으로 방역대(10km)내에는 5농가에서 1만4천804두가 사육 되고 있다.

지난 6월30일 이후 모든 8두와 웅돈 2두 등 10두가 폐사, 축주가 경북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했다.

해당농장은 특히 지난 6월15일 ASF가 발생한 경북 영천 양돈장과 같은 충북 소재 P도축장으로 출하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본지 확인 결과 역학관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올해 2월에 이어 지난 6월12일에도 농장과 9.05km, 4.26km 거리에서 야생멧돼지 ASF가 확인된 바 있다.

영천 ASF 여파?... 6월 돼지도축 '급감'



지난 6월 돼지 도축두수가 크게 줄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도축된 돼지는 136만5천166두로 잠정 집계됐다.

전월 대비 15.4%, 전년동월 대비 9.0%가 각각 감소한 물량이다.

특히 6월 한달 도축물량으로는 최근 5년간 가장 적었던 해로 기록됐다.

이는 돼지 출하가 줄어드는 계절적 요인에다, 영천발 양돈장 ASF 영향이 겹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6월 돼지 도축두수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돼지관측 범위(133~137만두), 그것도 최대 전망치에 육박한 만큼 ASF 변수가 아니었다면 또 다시 관측치를 넘어섰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돼지 도축두수는 앞서 지난 5월까지 줄곧 농경연 돼지관측치를 크게 상회해 왔다.

이처럼 돼지 도축두수가 줄면서 지난 6월 돼지가격(제주, 등외 제외)은 지육 kg당 평균 5천969원을 기록, 전월 대비 13.1%, 전년동월 대비 7.2%가 각각 상승했다.

“축산 상속세 공제 ‘중소기업’ 수준으로”

대한한돈협회가 축산 가업 상속 공제금의 상향을 건의했다.

한돈협회는 최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농민단체 대표자 초청 간담회’에서 축산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상속 공제금액 한도를 최소한 중소기업 최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축산 농가의 규모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대표적인 장치산업인 양돈만 해도 그 입지와 시설 현대화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나 국내 평균 사육규모인 2천두 농장의 고정자산액이 웬만한 중소기업과 비견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가축가액(생축)과 부채 등을 포함할 경우 양돈농가의 자산규모는 더 확대될 수 밖에 없다.

한돈협회는 평당 500만원에 육박하고 있는 양돈장 신축비용과 함께 3천두 규모(부지 1천평)의 양돈장 수용금액이 100억원으로 책정된 일부 지자체 사례를 그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축산영농 상속 공제 재산가액 한도는 3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가업상속 공제금액 한도액이 300~600억원에 달하는 ‘중소기업’의 5~1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가축의 경우 지난 2012년 제정된 ‘동산채권담보법’에 따라 담보권 설정이 가능, 금융권에서도 재산적 환산가치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공제재산 가액에는 포함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돈협회는 자녀에게 가업 승계를 희망하는 축산농가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속세 부담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최저 수준인 300억원으로 축산가업 상속 공제금 상향을 통해 가업 승계를 활성화,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도모할 수 있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산가치로 환산이 가능한 ‘생축’도 공제재산에 포함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돈협회 손세희 회장(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비단 양돈 뿐 만이 아니다. 축산업의 규모화 속에서 한우, 양계농가들의 자산 규모가 크게 증가한 상황”이라며 “축산을 통해 젊은층의 농촌 유입을 도모, 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상속세 조정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용란수집판매업 이중규제 사라진다



식용란수집판매업과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중복된 규제들이 대거 완화되며 선별포장업자들의 고충이 어느 정도 사라질 전망이다.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회장 전만중)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규제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바뀐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선 식용란선별포장업과 식용란수집판매업의 HACCP을 중복해 유지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졌다. 식용란선별포장업자들이 모두 식용란수집판매업 허가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 더 상위 개념의 식용란선별포장업 HACCP을 유지하면 수집판매업 HACCP도 인정되는 것이다.

단, 식용란선별포장업자가 HACCP 마크를 표기할 경우 ‘식용란선별포장업 HACCP’이라는 문구를 게재해야 하며 외부에서 매입한 계란은 반드시 재선별을 시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선별포장업자는 ▲계란껍데기 산란일자 표기 ▲최소 포장지에 '취급자' 표시 ▲선별포장업자 계란 판매 ▲외부계란 수집 등이 가능하도록 내용이 변경됐다.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 전만중 회장은 “앞으로도 정부 및 관련업계들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우리 산업 육성을 장려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완화를 요청할 것”이라며 “소비자의 위생·안전 확보를 더욱 강화해 회원사들의 권익증진과 수익 창출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정책 법정 간다



내년 9월부터 모든 산란계농가에 적용되는 사육면적 확대 정책이 결국 법정에서 시행 여부를 판가름받게 될 전망이다. 산란계 생산자들이 기존 사육농가에까지 해당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 입법’이라며 헌법소원에 나섰다기 때문이다.

대한산란계협회 소속 농가들은 최근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정책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농가들을 모집해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권리 구제 절차다.

생산자들이 문제를 삼은 것은 기존 농가에까지 사육면적 확대를 적용하도록 한 부분이다. 생산자들은 이 규정이 헌법 내 ‘법률 불소급 원칙’을 위배했다는 입장이다.

헌법은 제13조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법제처가 발간한 ‘법령입안심사기준’도 “침해적인 성격의 소급 입법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이념으로 하는 법치국가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정책을 기존 농가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소급 입법에 해당된다는 게 생산자들의 주장이다.

특히 ‘행정기본법’상 ‘비례의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산자들은 본다. 비례의 원칙 중엔 “행정 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 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